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11월 1차 (2020.11.1~11.15)



주요 현안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 마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97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②영유아 보육사업, ③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④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97

여성가족부,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 발표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을 발표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ILO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남성 0.7%p 하락)함
- 여성고용률(OECD 15~64세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남성 1.0%p 하락)함.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0대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1%p, 20대는 2.4%p 하락하였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2020.11.0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sn=704872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논의

☑ 여성가족부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가성평등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성별분리현상,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성된 국가 성평등지수 개편안 제시
 - *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등 시의성과 관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노동 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신규 지표 추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30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성희롱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
 -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지표’ 신설,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
 -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30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실시

☑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함.

- 2020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함. 2021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311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 | 내용 |
|--------|---|------------|--|
| 가족·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2020-10-29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재산 처분 제한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20-11-02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비,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혼인 및 출생신고 시 가족교육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통합근거 마련, 가족상담 전화 근거 마련 등 현 법률의 미비점 보완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 강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 2020-11-0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 2020-11-11 |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 일·생활균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20-11-03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때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안 제18조의2제1항)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0-11-06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한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마련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
| 여성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0-11-09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 개선(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

| | | | |
|-----------------|--|------------|---|
| 건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 2020-11-05 |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 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게 하며,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신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개정(안 제1조 등) |
| 법·계획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 2020-11-04 |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 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안 제68조제1항 및 안 제70조제1항 신설) |
| 젠더 폭력· 안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2020-10-29 |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비상벨 설치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 증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 명시(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 2020-10-29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추가(안 제34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의원 등 13인) | 2020-11-02 |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을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앴. 또한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보육기관의 장, 학교의 장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인지·대응하여 피해아동 보호(안 제12조 등)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 2020-11-04 |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 규정(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 2020-11-04 |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 2020-11-05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 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 확대(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

| | | | |
|-----------------|--|----------------|---|
| 젠더 폭력· 안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2020- 11-05 |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 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50조).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2020- 11-05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 2020- 11-0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안 제25조의2 신설)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 2020- 11-06 | 국가 등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안 제11조의2 신설 등)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2020- 11-06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0- 11-10 |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해 정의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성희롱 행위요건의 차이로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안 제2조제2호)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0- 11-10 |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늘리고,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km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
| |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0- 11-10 | 데이트폭력 등 예방 교육 시행,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0- 11-11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안 제8조 신설 등) |

| | | | |
|-----------------|--|----------------|---|
| 젠더 폭력· 안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 2020- 11-12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안 제37조의2 신설) |
|-----------------|--|----------------|---|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 과제명 | 날짜 | 매체명 | 제목 | 기사링크 |
|------------------------|-------|-------|--|---|
|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 11.04 | 아시아경제 | '아기 판매' 이어 '베이비박스' 옆 남아 시신까지...영아 유기, 해법없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0410555216182 |
|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 | 11.12 | 중앙일보 | 코로나 블루, 여성 극단적 선택 늘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918309 |

연구자 언론활동

| 날짜 | 매체명 | 제목 | 연구자명 | 기사링크 |
|-------|------|---|------------|---|
| 11.08 | 매일경제 | 해프닝으로 끝난 '강남역 스프레이' 여성들에게는 사실... |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44472/ |
| 11.08 | 연합뉴스 | '강남역 스프레이' 트윗...여성들에게는 해프닝이 아니었다 |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70300000004?input=1195m |
| 11.9 | KBS | 아직도 셋째아이 성별을 따진다고요?...국가성평등지수, 10년 만에 바뀐다 | 주재선 연구위원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3887&ref=A |
| 11.12 | 쿠키뉴스 | '직업 있는 영부인'이 낯선 이유는 | 김은경 연구위원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0374 |

유관기관 연구동향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과 가정외 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함.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20.11.09.]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99&ano=1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대응 관련하여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지표와 정부의 대응 추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2020.11.11.]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2196>